

제56회 국정과제회의 결과

I. 회의개요

□ 일시 및 장소 : '04. 11. 10(수) 10:00~12:00, 청와대 세종실

□ 회의 내용 :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

※ 발표 : 황덕순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

□ 참석자 : 대통령(주재), 국무총리, 한명숙 의원, 이목희 의원,
이정우 빈부격차·차별시정 위원장, 경제·복지·
노동·예산처 장관,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
위원·전문위원 등 60여명

II. 주요 발언 내용

대통령님 인사말씀

- 그동안 좋은 정책개발과 운용을 위해서 애써주신 민간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

보고내용 토론

□ 박능후 전문위원(경기대 교수)

- 오늘 발표는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 복지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. 이제까지의 복지정책과 방향이 크게 다름

- 즉, 지금까지는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놔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제도를 내실화하여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면
 - 오늘 보고내용은 절대빈곤층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빈곤층을 접근하겠다는 큰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것임
 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, 자산형성지원제도(IDA)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그 파급효과와 빈곤해소 효과가 아주 클 것이며
 - 이들 정책은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trade mark가 될 것임
 - 육구의 긴급성 면에서 차상위 빈곤층보다는 비수급 빈곤층이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비수급 빈곤층 등 절대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면서
 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와 자산형성지원제도(IDA) 등을 추진 하면 국민적 호응이 클 것임
- 최정은 (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 실장, 경기 시흥소재)
- 자활후견기관의 컴퓨터 재활용업체 컴윈 사례 등 발표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여명 자활사업참여중, 직원 6명)
 - 4년간 후견기관 운영비 동결로 인건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사업비는 점차 축소되어 활동이 제약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 필요

□ 대통령

- 자활후견기관 지원 현실화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은 각별히 챙겨보시기 바람
-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는 시장의 부담 때문에 많이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는데,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결과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많이 발생
 -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어 시장 속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

□ 김근태 복지부장관

- 특정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면 즉각적인 성과가 있어야 후속 지원이 가능한데
 - 자활지원사업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성이 있음

□ 대통령

- 사회적 일자리가 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해 거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를 통해 보편적으로 쓸만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
 -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쳐 정부가 국가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보자

□ 김근태 복지부장관

- 그렇게 하겠음

□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장

※ Microcredit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을 사례를 들어 설명

- 창업지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돈 보다도 사전·사후관리가 충실해야 하고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는 나눔의 문화가 확산·정착되는 것이 중요
- Microcredit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함
-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은행설립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함

□ 최병두 대구대 교수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나, 임시직을 정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오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현실화, 임시직을 상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필요
-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뿐만아니라 공동체(생산, 생태, 의료)를 추가할 필요
- 공동체는 이윤창출이 곤란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적극 개입하여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공기업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

- 일시직, 임시직 저소득 일자리를 향상시켜서 임시 일용 중심의 저소득 고용구조를 앞으로 중간소득의 고용구조로 전환·개선시켜 나가는 방안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

□ 한명숙 열린우리당 국정과제위원장

- 참여복지에 관한 비전과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함
- 철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가 필수적임
 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 도입은 참여정부의 야심작인데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홍보할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음
 - 다만, 소득과약이 가능한 대상부터 확대할 때 소외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불만을 해소할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
- 홍보와 관련하여 '빈곤탈출'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'가난극복'이라는 용어는 어떤지
 - 또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, 당정책 홍보라인을 통합적으로 가동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
- 금번 발표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미 구축돼 있는 고용인프라(고용안정센터, 고용보험)를 활용할 필요

□ 이목희 열린우리당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장

- 우리 사회는 미국과 유럽 중간쯤의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발표된 정책방향도 그러하다고 생각되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임
- 사회적일자리는 예산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
- 자활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관리는 철저히 하되, 단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서 좀 여유를 갖고 문제를 다루면 좋겠음
-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발표이후 각부 장관님들께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하게 홍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함
- 금번에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, 한계 및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장애가 있더라도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함

□ 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부장관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는 미국의 소득세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음
 - 우리 나름의 방식을 설계해야 하고, 소득세 체계를 모두 다 바꿔 도입하는 방안은 불가능함
 - 근로소득자는 소득과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계형 자영업자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,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으며, 생계형 자영업자를 외면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음

-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
- 또한, 민간의 기부금이나 자원봉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
□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

- 사회통합, 국민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로서 근로빈곤층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유용함
- 자산형성지원제도(IDA)도 주목할 제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.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재산의 불평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 필요
- 문제는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, 자산형성지원제도(IDA), 무보증 소액대출제도(Microcredit), 자활을 상호 통합하고 관통하는 체계가 필요

□ 김대환 노동부장관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 도입은 차상위 쪽으로 정책범위를 넓혀 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,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최하층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임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는 세제를 통해서 자기소득과 연계해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므로 좌파정책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임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 도입시 형평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

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함

-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게 주거지원인데 이 부분도 보충하면서 갈 필요가 있음
- 자활사업관리체계를 구분해서 접근하던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군구로 통합하는데 노동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겠음
 - 다만, 자활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상담이나 개별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는 준비단계가 많이 필요. 개별특성에 맞는 상당히 자세한 행정이 필요
- 사회적 일자리는 각 부처마다 발굴을 하면 꽤 있을 것임
 - 다만, NGO는 그 본질상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함께 하면서도 원활히 협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
 - 다른 부처들도 공통적으로 느낄 것인데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음

□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

- 인센티브와 함께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
 -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 수급기간 제한이라든지 연차적인 삭감 등도 검토 필요
 -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아지도록 이번 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- 정부의 내년도 최종예산안에는 예산이 경우 81%가 늘어났고

인원수로는 50%가 늘었음

-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도 예산은 매년 37% 늘어나며, 진행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추가 반영도 가능할 것임

□ 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

- 개방과 경쟁체계 하에서 가장 문제되는 계층은 차상위층임
 - 최저생계비 이하계층은 어차피 도와줘야 하지만 점점 더 개방과 경쟁체제로 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이 차상위층임
 - 차상위계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방체제로 가기가 어려움. 그런 의미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

□ 이해찬 국무총리

-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함
 -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시장경제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선이나 혜택 차원의 문제가 아님
- 빈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, 식, 주, 의료, 교육인데 현재로 보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거부분임
 - 수도권 46%가 세입자인데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늘 불안함. 임대아파트라도 입주해서 주거가 안정된 사람은 심리적 동요가 없음
- 따라서 주거문제를 공공화 시켜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임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. 주거를 안정시켜야 그 다음의 복지

서비스에서 접근과 관리가 가능

대통령님 마무리말씀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 도입시 과세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문과 오해가 없도록 할 것
 - 개인단위 과세체계를 가구단위 과세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개인별 자료를 필요한 만큼 통합하면 됨
 - 과세체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음
 - ※ 경제부총리 및 보고자에게 확인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는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할 것
 - 소득과약이 어려운 자영자 문제가 있고 근로자 먼저 적용할 경우 혜택을 못 보는 계층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으나
 - 일하는 사람에게 한 일자리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임
 -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짜 나가자는 것이 오늘의 토론 결과이고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없는 것 같음

- 근로빈곤층·기초생활 수급자를 묶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 내용과 같이 정하고

- 세부적인 정책들도 보고된 바와 같이 개발해 나갈 것
 - 다만, 세부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할 것
- 이 정책은 대통령이 단순히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따라줘야 성공
- 잘 다듬어서 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
 - 개별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과제를 정리·개발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토론될 수 있도록 할 것
-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실무 공무원간 토론 및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
- 이와 같은 (사회)정책은 그동안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식하에서 추진해보지 않아서, 귀찮거나 힘들기 때문에, 또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음
 -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정부의 중요과제로 공무원들이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까지 진행할 것
- 정책 내용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공론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
- 용어(차상위계층,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)를 순화하는 등 생활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토론할 필요

□ 소요예산의 경우에도 현행의 미국식으로 하면 2조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

- 단계적으로,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어느 정도부터 출발하는지를 밝혀, 다른 의문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

□ (고용안전망을 활용하자는 한명숙의원의 건의에 대해) 고용안전망은 중간계층을 포함해서 전체계층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으로서

- 전체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빈곤층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빈곤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따로 가져갈 필요
- 추락하고 있는 중산층 전부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또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음

□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이 과제를 전략적 홍보과제로 설정해 볼 것

- ※ 전략적 홍보 개념 : 정책을 아주 내실있게 입안하는 것뿐만 아니라,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

□ 이 정책(복지정책)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음

-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,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이 필요하므로 홍보방향도 그 방향으로 설정할 것

□ 정부부문은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 생산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

- 이 경우 지원기준 설정은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요구해야 하는 것은 투명한 회계처리임
- 지원이후 평가는 더 더욱 어렵지만 평가방법의 개발은 정부의 역할이므로 연구해주시기 바람

※ 발언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발언 요청

□ 류기철 충북대 교수
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가 도입된 90년대 미국의 복지개혁 후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결과를 가져옴
- 이는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의 결과만은 아니고 함께 진행된 복지개혁, 미국 경제의 호황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나
 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는 아주 성공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, 유럽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
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를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소득보고를 의무화하는 전제를 달면 도입이 보다 용이할 것임

□ 이태수 위원

-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성공사례를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이 보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
- 최근의 복지확대에 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답보 상태에 있어 앞으로 정책의 확대과정에서 전문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